식민지권력에의 '협력'과 좌절

— 經學院과 향교 및 문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류 미 나

1. 머리말
2. 세력유지의 상징 공간: 향교와 문묘
   1) 식민지권력의 체현 공간
   2) 권위의 상징 공간
3. 경학원과 향교 및 문묘의 계층적 질서
   1) 경학원을 통한 식민지권력과의 접촉
   2) 식민지권력으로 복속된 '전통'제사
4. 구질서의 혼돈, 식민지권력과의 타협, 그리고 좌절
   1) 식민지 정치로의 변화와 향촌 질서의 혼돈
   2) '舊慣 타파': 근대 지식인의 도전
5. 끝으로

1. 머리말

필자는 식민지기 조선의 經學院 및 明倫學院의 기초적 고찰을 통해 조선총독부의 유교이데올로기를 이용한 조선인 교화정책에 관한 내용과 그에 호응하는 유림집단의 동향을 검토해 왔다.[1] '萬世一系의 황실을 중심'으로 한 일본제국의 유교이데올로기는 식민지기 조선사회에서 조선인 교화정책의 역할을 담당했다. 일본제국은 조선왕조시대 최고의 학부인 성균관을 총독부의 하위기관인 경학원으로 개편하여 교화활동을 주도해 나갔고, 이를 통해 대한제국 때까지 지켜온 유교적 의례를 변형시켜 일본제국에 대한 忠의 사상과 일본 천왕의 赤子로써 지녀야 할 孝의 사상을 강조하는 '근대 식민지 유교'의 새로운

1) 拙稿, 2004「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経學院 : 儒教教化機關と儒教イデオロギーの再編」『朝鮮史研究會論文集』第42集 ; 拙稿, 2004「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明倫學院 : '儒教振興'をめぐる植民地權力と儒林勢力の相克」『史適』第26号.

정신을 창출해갔다.[2)]

특히 경학원은 주로 식민지기 조선사회의 양반·유림[3)]을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했는데 그것은 대한제국기를 통해 이들을 주축으로 한 항일운동에 대한 총독부의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신분제도의 변화로 인해 이들 세력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조선사회에 미치는 이들의 권위는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1911년 6월 15일 총독부에 의해 조선왕조시대의 성균관을 개편해 설치된 경학원[4)]은 종래의 성균관이 담당했던 관료인재의 양성이 배제된 채 文廟釋奠이란 의례만이 허락된 사회교화 기관이었다. 경학원은 조선총독부 정책을 보조하면서 조선 각지의 향교와 문묘 및 제 유림단체와 상호 '협력'관계를 가지며 총독부의 선전도구로써의 역할을 담당했다. 1930년에는 그동안 배제되었던 인재양성의 기능이 부활되며 명륜학원이라는 부설 교육기관이 설치되었는데, 이곳의 졸업생들을 경학원의 직원으로 채용할 뿐 아니라 각지의 향교나 소학교의 교원으로 배출했다. 또한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기에 들어서 일본은 물

---

2) '근대 식민지 유교'의 정신이라 함은 일본제국의 '황실을 중심'으로 하고 '일본국가'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충효의 사상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필자의 방법적 개념으로 설정한 것으로 이 개념으로 바라 본 일본제국의 유교이데올로기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拙稿, 2004「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経學院 : 儒教教化機關と儒教イデオロギーの再編」.

3) 여기서 말하는 양반·유림세력, 그리고 후술의 士林, 유생 등의 용어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그 의미에 차이가 있으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다만 본고에서 호칭되는 양반이나 유림은 사료 용어로써 사용하고 있으며 편의상 그 개념을 상정한다면 유교적 질서를 지향하고 체현하는 사회집단을 가르킨다. 이 집단은 "관료기구를 매개로 총독부 권력에 강하게 종속된 하위 동맹집단"이라고 규정하는 지수걸의 '지방유지집단'의 조건인 재력과 학력, 당국의 신용, 그리고 '사회 인망'을 갖추고 있으나 전통적 질서의 체현을 중시하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이 개념도 지역의 실태를 사례로 볼 때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지수걸, 1996「일제하 공주지역 유지집단 연구-사례1 서덕순의 '유지 기반'과 '유지 정치'」『역사와 역사교육』1 ; 1999「일제하 충남 서산군의 '관료-유지 지배체제'」『역사문제연구』3.

4) 明治44년 6월「조선총독부령」제73호,「經學院規程」1911년 6월 15일 공포.「경학원규정」의 구체적 시행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동년 8월 1일의「조선총독부훈령」제65호에 의해 경학원의 직원이 임명되면서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했다고 보여 진다. 明治44년 8월「조선총독부훈령」제65호,「經學院」1911년 8월 1일 공포.

론이고 식민지에도 강력한 전시총동원체제가 요구되자 '皇道儒道의 진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학원을 중심으로 한 제 유교관계 단체의 통합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朝鮮儒道聯合會'가 발족되는 등 경학원의 역할은 조선총독부의 조선지배정책과 보조를 맞추며 진행되어 갔다.

현재까지 경학원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李明花의 「조선총독부의 유교정책」과 鄭圭永의 「조선총독부의 조선유교지배」가 대표적 성과인데[5] 그 중 이명화의 연구는 경학원을 연구한 최초의 학술적 논문이다. 이 글은 사료에 입각한 실증적 조사를 기반으로 1920년대까지 경학원에서 활동했던 직원의 경력과 총독부의 정책을 명확하게 밝힌 점에서 그 의의가 깊다. 정규영의 연구 또한 이명화의 연구 성과와 더불어 조선총독부의 경학원의 교화사업을 밝히고 있으며 경학원이 총독부에 이용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는 기본적 자료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경학원의 실태에 관해서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다. 특히 경학원이 소수의 친일집단 중심의 기관이란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응하는 유림들에 대해서도 수동적 태도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 시기를 성균관의 '수난기'라고 규정하고 있어 경학원의 세력들을 친일과 반일의 이항 대립적 구도로만 보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오히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경학원 및 명륜학원과 관계하고 있는 집단은 단순히 친일세력이라고 할 수 없는 동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이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내세운 '유교의 진흥'과 '동양 고유문화의 유지'라는 슬로건의 실태가 총독부의 정책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 그리고 경학원과 명륜학원 운영에 참가하고 협력한 집단은 총독부의 정책에 호응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지배에 의한 복종이 아닌 그들의 '능동적' 선택의 부분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필자의 연구 또한 부족한 점이 지적되어 경학원과 당시의 지방문묘와의 관계, 그리고 양반과 유림집단의 규명이 요구되었다. 그 중 필자는 경학원의 활동이 당시의 경성(이후 중앙이라고 표현)[6]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지방과

---

5) 이명화, 1993「조선총독부의 유교정책」『한국독립운동사연구』7 ; 정규영, 1996「조선총독부의 조선유교지배」『학생생활연구』4 ; 성균관대학교, 1998『성균관대학교 육백년사』.

6) 여기서 경성을 중앙으로 칭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적 차별성을 두는 의미만이 아

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을 참고로 중앙의 경학원과 지방의 문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고려하여 경학원의 기관지인 『經學院雜誌』를 분석하고 경학원에 게재된 「지방보고」란과 제 신문 자료를 중심으로 경학원과 지방문묘의 관계 및 그 활동내용을 파악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첫째로 경학원과 향교 및 지방문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총독부의 기관인 경학원에 대한 지방문묘의 인식을 확인하고 싶다. 둘째로 향교와 문묘 그 자체에 대한 분석은 아니지만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양반·유림집단이 식민지권력에 어떻게 대응했으며 그러한 대응책의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추적하면서 '근대'이행기에 보이는 이들의 동향을 검토해 보려 한다.

2. 세력유지의 상징 공간: 향교와 문묘

이 장에서는 식민지기 조선의 향교와 문묘를 검토함으로써 이들 공간의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 시기 향교와 문묘에서 행해진 제 행사를 둘러싸고 양반과 유림집단, 그리고 그 외에 새롭게 이곳을 이용하는 집단들의 인신과 행동을 살피고자 한다.

조선총독부는 1911년 12월 28일 조선총독부령 제127호에 의해 종래의 '향교직원'을 '문묘직원'으로 직명을 변경시키고 각 문묘에 직원을 1명씩 두었다. 그리고 직원의 임명에 관한 일은 부윤, 군수, 도사의 신청에 의해 도지사가 담당했다.[7)]

총독부의 기록에는 '향교직원'의 명칭을 '문묘직원'으로 변경시킨 이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추론해 보면 지방의 관학으로서의 향교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배경과 총독부의 지배정책의 의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즉 향

닌 '중앙-지방'사이의 권력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의미로써 사용한다.

7) 明治 44년 10월 「조선총독부령」 제127호, 「文廟職員に關する件」 1911년 11월 1일 시행. 이것은 1923년이 되면 다시 변경이 되는데 「조선총독부령」 제68호(大正 12년 4월 「조선총독부령」제68호, 「地方文廟職員に關する件」 1923년 4월 21일 시행)에 의하면 경기도 개성군 송도문묘에는 직원 외에도 司成을 1명 임명하기로 되었으며 이 사성의 임명은 도지사의 신청에 의한 조선총독이 직접 담당하기로 명시되어 있다. 송도문묘에 사성을 둔 이유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기로 한다.

교직원의 명칭을 문묘직원으로 변경함으로써 향교의 인력양성 기능 보다는 문묘의 의례기능을 중요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식민지의 원활한 지배를 의도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식민지기 조선의 문묘가 어떠한 성격의 공간이었는가를 확인하는 일은 당시의 지방사회를 관찰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필자는 『경학원잡지』의 「지방보고」란과 당시 신문지상에 기사화 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식민지 조선의 문묘에 대한 성격을 평가해 보려고 한다.[8)]

경학원 기관지 『경학원잡지』의 「지방보고」란은 잡지가 간행되면서 게재되었으며 이곳에는 각 지역의 행정적 변화나 지역사회의 동향, 해당 지역의 주요인물의 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일반에 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보고의 주체는 지방문묘의 직원이나 그 지역의 유림일 경우가 많았다.

1) 식민지권력의 체현 공간

먼저 지방의 문묘의 성격은 '유교적' 의례의 재현 공간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 있다. 그 중 「지방보고」란에도 가장 많이 게재되는 석전의례는 문묘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행사였다. 식민지기에 와서도 문묘에서는 1년 중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문묘석전제를 거행했는데 석전제의 執事는 대한제국기의 경우 그 지역 유림이 담당했으나 식민지기 이후에는 지역의 군수가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본인 군수가 재임 중인 지역은 석전의 獻官 또한 일본인 군수가 담당했다.[9)]

「지방보고」란에는 석전의 거행시간 및 그 상황은 물론, 참가자의 인원 수와 구성의 관한 것, 행사 후의 모습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1916년 9월 전라남도 順天郡 문묘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문묘석전에 군

8)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조선사회의 문묘를 완벽하게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각 지역마다 특성과 구성원 층의 차이로 인한 차이는 있을 것이다.

9) 예를 들어 1933년 9월 28일에 보고 된 황해도 義州郡의 경우 大沼喜久衛라는 일본인 군수가 초헌관을 담당했다는 기록이 있다. 『경학원잡지』제37호, 1934년 10월, 48면.

수와 관리가 참가했고, 보통학교의 직원과 생도 등 200여명과, 양반과 유지 등 350명이 참가해 총인원이 550여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10] 1925년 9월28일에 거행된 강원도 강릉군 문묘의 보고서에는 문묘석전에 군수와 관리, 향교장의와 유림, 공립 및 사립학교의 직원과 생도 등 1200여 명이 참가했다는 내용이 있으며 1932년 9월 3일, 전라북도 전주군 문묘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문묘석전에 官公吏 및 유림 100여 명과 각 학교의 직원과 생도 등 약 700여 명이 참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11] 이러한 보고서들을 통해 식민지기 조선의 문묘에는 유림, 도지사, 군수, 해당지역의 유지, 면장, 헌병경찰, 관립·공립·사립의 보통학교 직원 및 생도 등이 참가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시기 문묘에서 행해지는 석전의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석전제와 각종 강연회가 병행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강연회는 주로 향교의 명륜당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처럼 석전의례와 강연회가 함께 진행된 것은 석전의례 시간에 가장 많은 청중들이 모일 수 있었기 때문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제 강연회가 꼭 유교와 관계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강연회에서는 오히려 조선총독부의 시정에 관한 내용이나 새로운 법규에 등의 설명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경학원의 「経學院講演施行に關する要項」을 살펴보더라도 지침 내용 제4항에는 "강연일시, 제목, 강연자 및 강연장소를 미리 선정해 유림과 학교 등에 통보하여 되도록 많은 인사가 청강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경학의 講明은 勅語(教育勅語-인용자)의 취지를 실행하는 것으로 皇恩의 우악함을 진설하고 시정의 취지를 주지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12] 제 강연회가 석전의례의 시기에 맞추어 열린 것은 총독부의 교화적 수단으로 향교와 문묘를 이용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교화적 목적의 강연이 종료된 후에는 "강연자, 제목 요령, 청취자 수 및 그 상황을 기재하여 지방장관과 경학원의 대제학을 걸쳐 총독부에 보고하는 것을 규정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교나 문묘에서도 경학원과

10) 1928년 현재 이 지역들의 유생의 수는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 順天은 643명, 강원도 강릉지역은 110명, 전라북도 전주군은 448명이다.
11) 『경학원잡지』제27호, 1926년, 73면 ; 『경학원잡지』제36호, 1933년 12월, 27면.
12) 「経學院講演施行に關する要項」通牒學 제1238호, 1915년 9월 4일.

같은 형태로 강연의 내용에 대한 사전 검열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13] 실제로 문묘의 제 행사는 관할 경찰서의 감시 하에 진행됐는데 각 郡의 경찰병력, 혹은 헌병 경찰 등이 참가한 것이다. 예를 들어 1920년 9월 16일에 거행된 전라북도 金堤문묘의 석전행사는 軍警官吏와 사림 등이 참석했다는 보고가 있으며,[14] 중앙의 경학원 역시 문묘석전의 행사에는 해당 관할서인 동대문경찰서가 分署의 경부순사를 배치하였다. 그 외의 제 행사에도 순사의 감시는 끊인 적이 없었다.[15]

이러한 보고내용을 보면 당시의 향교와 문묘는'유교적'문화의 재현 공간이며 '전통'의례의 계승 공간이면서 조선총독부의 권력이 가시적으로 체현되는 교화의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문묘는 과거의 각 지역에 존재했던 열부, 節婦의 공적 찬미와 효행에 대한 현창 활동이 빈번히 이루어진 곳이었다. 그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1916년 3월 전라남도 唐津郡 문묘직원 李畝默과 金琯鉉을 비롯한 다수의 사림들이 경학원에 來牒을 보냈는데 그것은 당진군 金塘里에 거주하던 姜珍秀의 자부 최씨가 부모의 병환을 낫게 했다는 내용이었다.[16] 또한 동년 9월 전라북도 金堤郡 문묘에서는 문묘직원 趙榮과 柳種奎를 비롯한 사림들이 趙方暉 라고 하는 인물의 효행을 기리는 보고서를 올리기도 했다.[17]

이러한 효행 및 節婦에 대한 보고는 191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는데 1920년대에 들어서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30년대에도 이러한 증가추세는 계속 유지 되고 있었다. 수치로 살펴보면 1918년 한해 경학원에 보고 된 문묘의 보고서는 모두 50회인데 이 중 효행과 열부에 관한 내용은 2회, 즉 4%에 해당한다. 그러나 20년대에 들어서면 그 수치가 높아져 1926년의 경우 45회의 보고 중 효행과 열부에 관한 내용은 14회로 전체의 31%에 해당한다. 1933년의

13) 위의「경학원 강연 시행에 관한 요항」.
14)『경학원잡지』제21호, 1921년 3월, 96면.
15) 문묘석전의 경호 요청은 조선총독부 내무부장관의 명의로 경무총장에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호의 요청은 문묘석전 행사마다 계속되었다.「文廟釋奠擧行狀況報告ノ件」1912년 9월 19일,「釋奠擧行に關する件」1913년 2월 25일,『經學院享祀關係書類 14』88-15, 국가기록원소장.
16)『경학원잡지』제11호, 1916년 6월, 80면.
17)『경학원잡지』제12호, 1916년 12월, 83면.

경우, 보고 횟수는 91회인데 그 중 효행과 열부에 관한 현창 활동은 30회에 이르러 약 30%에 해당되는 수치를 보인다.[18)]

필자는 이러한 지방의 효행과 열부의 현창사업을 총독부의 '朝鮮史編纂委員會'의 활동과 관계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조선사편찬위원회와 경학원, 그리고 향교가 긴밀한 인적 교류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선사편찬위원회는 1922년 12월 4일 조선총독부령 제64호[19)]에 의해 발족한 기구인데 『조선사』의 편찬 및 조선에 관한 사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곳이었다. 총독부 정무총감이 위원장을 맡을 만큼 총독부의 정책 중 비중이 있었던 조선사편찬위원회는 중추원과 협조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중추원의 참의와 대한제국기의 관료들이 촉탁으로 위원직을 담당했다.

조선사편찬위원회의 조사 활동 중 각 지방의 열부, 절부, 효행 등과 같은 덕행자의 자료 발굴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이러한 조사는 조선의 사료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조사할 만한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역시 양반·유림집단일 가능성이 높고 그들 중 총독부와의 연계가 가능한 것은 향교일 것이라 추측된다. 실제로 이들 지방의 양반·유림 중 중추원의 참의를 맡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중추원의 참의는 조선사편찬위원회에 위원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위원 중에는 경학원의 직원 출신자도 있었으며 중추원의 참의와 경학원의 직원을 겸하는 일은 흔한 경우이기 때문에 총독부의 조선사편찬위원회 활동은 경학원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특히 경학원 직원 중에는 지방의 군수 혹은 평의원 재임 시 조선사편찬위원회의 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인물도 보이는데 경학원의 사성·李敬植, 李宣鎬, 梁鳳濟 등이 그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경학원의 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총독부 조사과의 촉탁으로 임명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조선사편찬위원회'와 같은 총독부의 조사 활동에 경학원이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18) 이상의 수치는 『경학원잡지』제1호부터 제48호에 이르는 「지방보고」란을 참조하여 각 년대에 보고 횟수가 가장 많은 해를 지정하여, 효행과 열부의 현창 상황을 계산한 것이다.

19) 大正11년 12월 「조선총독부령」 제64호, 「朝鮮史編纂委員會規程」1922년 12월 4일 공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조선사편찬위원회는 조선 각지의 실지조사와 서적 조사를 담당해 왔으며 조선 내 각지에 산재한 사료들의 수집이 주력사업이었는데 이를 위해 각 지방 관청의 협조가 필요했다. 특히 중앙 및 지방의 민가에 소장 된 사료 수집을 위해서는 조선사편찬위원회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1923년 6월 12일 중추원에서 개최된 제2회 조선사편찬위원회의 회의석상에서는 위원회의 핵심 인물인 稻葉岩吉이 사료 수집에 용이한 방법으로 각종 강습회를 이용한 홍보 활동을 제시했다. 중추원 참의인 洪憙 위원은 조선사편찬위원회의 편찬사업에 대해 조선 사회에서 "內地人이 중심인물이 되어 편찬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덕행 있는 사람과 특종 인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를 부탁하고 지방의 장관을 통해 자세히 아뢰는" 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지방에 있는 역사상의 인물에 대해서는 역사에 넣지 않는 것이 관습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음을 일반인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

조선사편찬위원회의 사업과 향교와 문묘와의 직접적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나 수치로써 생각해 볼 때 조선사편찬위원회의 방침이 결정된 후 지방 문묘에서 경학원으로 보고 되는 내용 중에 열부, 절부, 효행에 관한 사항이 급격히 증가된 것은 사실이다.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지방의 '특종인물' 조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1923년 이전까지 「지방보고」란에 열부, 절부, 효행에 관한 내용의 빈도는 전체 평균 11%를 차지했는데 1923년부터 33년까지의 상황을 보면 26%까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21] 그 중 1923년 6월에 열린 제2회 조선사편찬위원회의 수료 직후 인 1924년에는 전년도인 1923년에 26%를 차지했던 열부 등에 관한 보고가 36%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이듬해인 1925년에는 전체 보고 내용 중 80%에 달하는 보고내용이 열부 등의 현창에 관한 것이었다.

---

20) 『조선사편찬위원회 회의록』1923년 6월 12일 중추원 회의실.

21) 이 수치는 「지방보고」란을 참고하여 열부, 절부, 효행에 관한 보고의 확인이 가능한 년도를 추려서 계산한 것이다.

2) 권위의 상징 공간

조선왕조 후기에 이르러 지방의 향교는 지방의 관학으로써의 교육기능이 쇠퇴하고 과거 엄격하게 제한되었던 비 양반들의 출입이 잦아지는 한편 향교의 靑衿錄에 비 양반의 입안하려는 시도 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윤희면씨는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조선왕조 후기의 향교에는 여전히 사족 층의 권위가 강하게 존재하던 곳이었다고 보고 있다.[22] 이들은 비 양반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향교 및 문묘의 각종 보수사업과 그 재정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으로 자신들의 세력과 권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현상이 식민지기 조선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절에서는 식민지기 조선의 향교 및 문묘의 활동을 검토하면서 그것이 중앙의 경학원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식민지기 조선의 지방 향교와 문묘의 성격을 검토할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첫 번째로 이곳을 중심으로 한 여러 조직의 형성인데 그 중 향교와 문묘를 중심으로 가장 활발한 조직력을 형성하고 있는 단체는 '儒林契','明倫契','慕聖會'등과 같은 유교 관계의 단체이다. 이들의 설립 목적은 '문묘유지의 방침'이나 '문묘석전의 계획', 그리고'유교의 진흥' 등이었다.

예를 들면 1917년 3월 충청남도 아산군 문묘의 보고서에는 '문묘 유지회'가 조직되어 회원이 400명에 이른다는 것과 입회금으로 500圓을 모았다는 내용이 있고 1918년 12월 17일 전라남도 구례군 문묘의 보고서에는'유생 양반회'의 조직 과정 및 68명의 회원, 그리고 1549圓의 의연금이 모금되었다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1919년 1월 13일 강원도 홍천군 문묘는 '향약계'의 조직과 1500圓의 모금활동에 대한 것을 보고했다.[23]

이들 문묘의 보고서를 보면 문묘의 수리비를 위한 모금활동이 빈번하게 전개되었으며 그 액수는 거액에 해당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22) 윤희면, 1990『조선후기 향교연구』, 일조각.
23) 『경학원잡지』제14호, 1917년 7월, 63면 ; 『경학원잡지』제20호, 1920년 3월, 54면-55면.

다음과 같다.

1916년 9월 경상남도 창원의 문묘직원 安培來의 보고에 따르면 1913년 2월 문묘에 화재가 발생하여 문묘의 前직원인 成瑾鎬와 사림 盧康稷, 金性東, 曺錫八, 盧鶴容 등이 각자 60圓을 출자했고 그 외의 군에 있는 사림들이 일제히 의연금 2000圓을 모금하여 1914년 3월에 수리를 했는데 1916년 2월 창원군의 사림 金國東, 成煥永, 孫泰鉉, 盧鳳洪, 曺憲永 등은 100圓을 더 추가로 모금하여 제기 등을 수선 하였고, 낙성식을 위해서 그 외 사림들이 200여圓을 더 출자하였다고 한다.[24] 또한 1920년 2월 25일 전라북도 김제군의 문묘직원 趙翰誠의 보고에 의하면 문묘수리를 위해 靑衿契를 조직했는데 이때 참가한 사람이 400여명이며 2000여圓이 모금되었고 그 중 1400圓으로 문묘를 수리 하고 잔액으로는 제향비로 사용 했다는 내용이었다.[25]

1928년 4월 3일자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면 경상남도 의령군의 향교를 수리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의령군 12개 농민단체가 조직한 '의령농민연합회'는 간부회를 열고 결의를 다졌는데 그들은 "급선무인 교육시설이 아직 미비할 뿐 아니라 농촌의 파멸이 날로 심해가는 이 때에 7000여圓의 거액으로 향교를 중수한다 함은 시대의 착오"라며 비난하고 있다.[26]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향교와 문묘는 여전히 유교적 의례와 유교적 가치기준이 중심이 되었던 공간이었으나 '의령농민연합회'와 같은 비 유교관계 세력으로부터는 비판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향교는 인재양성을 위한 공간이었다. 이는 대한제국 말기에 보이는 향교 내 新학교의 증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27] 이 시기 고무되었던 향교의 근대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식민지기에 들어서도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923년 4월 1일 충청북도 옥천군 문묘직원 崔命台는 1922년 향교에'首善講習所'가 마련되어 180명의 학생이 등록하여 수학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1주일에 2회씩 윤리, 도덕, 性理를 교수하고 있다는

24) 『경학원잡지』제12호, 85면.
25) 『경학원잡지』제21호, 93면.
26) 『동아일보』 1928년 4월 3일 기사.
27) 강대민, 1992 『한국의 향교연구』, 경성대학교 출판부.

내용도 게재되어 있다.[28] 1926년 4월 22일 경상북도 청송군 문묘직원 沈能鎭의 보고에는 동년 3월 19일 문묘석전 행사 이후 유도진흥을 위해서 도서관을 설치하기로 협의했다는 내용이 있다.[29]

그 외에도 각 문묘는 백일장이나 詩賦제작대회 등을 개최해 합격자를 표창하는 행사를 거행하곤 했는데 이러한 행사에는 많은 인원이 참가해 1917년 10월 17일에 거행된 백일장의 경우 행사 참여자가 12000명이며 제출된 작품은 3000장에 이른다는 기록도 있다.[30]

이와 같은 사례들을 검토해 보면, 지방의 향교는 인재양성의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곧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재생산을 위한 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 향교와 문묘는 양반·유림집단과 근대 지식인들 간의 갈등 공간이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향교와 문묘는 조선왕조 후기에 이르러 서원에 비해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지만 양반 및 유림집단들에게는 여전히 상징적 기반이었을 것이다.[31] 식민지기 조선에서도 이러한 성격이 유지되어 양반과 유림세력의 규합을 도모할 때에는 향교와 문묘가 그 중심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1925년에 경상북도 安東의 陶山서원 철폐운동이 일어나자 그에 대응책이 마련되었는데 1925년 12월 23일 전라남도 나주군 檜淵서원의 발기와 상주군 道南서원의 후원으로 상주향교에서 개최된 '全道儒林大會'가 그것이다. 이 대회에서는 유교적 권위에 도전하는 비판세력들과 대항하자는 결의가 강하게 표출되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시기에 따라서는 식민지기 조선의 문묘와 향교는 비유교관계 집단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1926년 9월 14일자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면 전라남도 곡성군 玉果지역의

---

28) 『경학원잡지』제24호, 1923년 12월, 94면.
29) 위의 잡지, 94면 : 『경학원잡지』제27호, 85면.
30) 『경학원잡지』제16호, 1918년 3월, 35면.
31) 강대민의 연구에 의하면 대한제국기 향교에 학교시설을 설립하고 문묘의 향사를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생각할 때 향교의 기능은 쇠퇴했다고 하나 그 상징적 권위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강대민, 앞의 책.

노동자 120명이 옥과향교에서 노동회를 창립하고 "무산대중의 합리한 생활에 획득을 기"함과 동시에 "상호부조의 원칙과 일치단결의 힘으로 賃金의 인상과 대우의 개선 등 당면 이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함을 기"한다는 내용의 강령을 제시했다.

또한 1927년 11월 2일자 『동아일보』에는 경상남도 함안군 청년회가 군내에 있는 함안향교 광장에서 산재한 청년단체 통합을 위한 준비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다.

위의 사실들을 확인해 보면 향교 및 문묘는 여러 세력들의 권위를 과시하는 장소로 이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32] 또한 이곳이 양반과 유림집단이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확인하고 그 권위를 과시하는 목적으로 이용되었지만, 그 권위에 도전하는 집단들의 제 활동을 볼 때 이 시기 향교 및 문묘는 조선왕조시대와는 달리 향교 및 문묘 안의 권위의 중심이 보편화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식민지기 조선의 향교와 문묘는 더 이상 양반과 유림의 전통 계승과 세력 유지의 전유물이 아닌 '근대'로의 이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전통적 권위'와 '근대적 질서'가 충돌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경학원과 향교 및 문묘의 계층적 질서

여기서는 경학원과 지방의 향교 및 문묘와의 관계를 통해 경학원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이는 종래 경학원의 활동이 소수 친일파세력이며 식민지기 조선사회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의견에 의문을 갖고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경학원과 지방의 향교 및 문묘와의 관계, 특히 지방 향교와 문묘를 주도하는 세력들의 경학원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1) 경학원을 통한 식민지권력과의 접촉

경학원에서는 각 지방의 문묘에서 실시된 각종 행사와 여러 유림단체의 활

32) 물론 향교와 문묘 외에도 조선인이 집단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양반·유림세력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으므로 향교와 문묘를 예로 들었는데 그 외의 공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동 및 그 구성원의 특이사항 등을 작성한 보고서를 수집하였는데 그 가운데에는 향교재산의 환부 문제 및 문묘직원의 임명에 관한 민원을 조선총독부에 의뢰한 경우도 있다. 또한 그 보고서 중에는 경학원의 강사가 해당 지역의 향교와 문묘를 시찰 및 조사를 실시 한 후 경학원에 제출한 것도 있다. 필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제출되는 보고서의 빈도수와 그 내용인데 각 지방별 수치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912년 10월 경기도 果川문묘는 『경학원잡지』의 「지방보고」란에 가장 먼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경학원의 경기도 지역 담당 강사 黃敦秀에 의한 이 보고서는 과천군 三里의 朱子 影堂 건립을 위한 유림들의 금전 출자 상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33] 그러나 이 보고서 이후 『경학원잡지』에는 타 지역의 보고서 기록이 중단되었으며 재차 지방향교 및 문묘에서 보고서가 제출된 것은 1915년에 이르러서였다. 1915년 이 후 점차적으로 문묘에서의 보고서 제출 빈도수는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대략적인 상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11년부터 1919년까지 경학원에 보고서를 제출한 문묘는 91개 군에 해당한다. 이것은 전체 240개 군 중 약 37.9%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보고서의 제출 빈도수를 지역 순으로 들면 경상남도 지역의 문묘가 가장 많은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 다음이 평안북도, 강원도, 충청남도, 황해도, 함경북도의 순이며 그 뒤를 이어 전라북도와 평안남도,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함경남도, 충청북도가 뒤를 잇고 있다.

1920년부터 1930년까지 경학원에 제출한 지방 문묘의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군의 통폐합으로 인해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152개의 문묘에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체 군의 약 63.3%에 해당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충청북도 지역의 경우인데 조선 전 지역에서 가장 많은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점이다. 이 지역이 대한제국 시대에 의병활동이 왕성했던 사실과 비교해 보면 식민지기 이후 지역사회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34]

---

33) 『경학원잡지』제1호, 1913년 12월, 79면.

34) 1908년 『朝鮮及滿洲』6월호에 의하면 충청북도의 의병활동은 대단히 왕성했으며 "이번의 폭도 봉기에 있어서도 그 세위가 대단히 창궐해 극에 달아 (중략)소실가옥이 민가만 해도 1700여 호를 웃돌"아 이 지역을 "慓悍하고 不逞의 무리"라

1931년부터 1943년까지는 205군의 문묘에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조선 전 문묘 중 약 85.4%에 달하는 문묘가 경학원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말한다. 그 중 앞서 말한 충청북도와 평안북도, 그리고 강원도 지역 문묘는 100% 모두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조선총독부의 지배 정책과 조선사회의 변화 등과 향교 및 문묘의 보고서 제출 경향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1915년 이후 경학원에 제출되는 각 지역 문묘의 보고서 증가 추세는 조선총독부 시정 5년을 넘어서 조선 지배체제의 안정과 조선 내 항일 의병활동의 소진에 의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조선총독부의 조선 식민지화가 조선 사회에 서서히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1920년대 이후 1930년대 초반에 보이는 각 지역 문묘의 보고서 제출의 증가는 3·1 독립운동으로 인한 총독부의 항일세력 탄압과 조선내의 활동의 무산, 그리고 '문화정치'라고 하는 정책 변화와 조선지배 기간의 장기화를 원인으로 들 수 있겠다. 1930년대에서 194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향교와 문묘의 보고서 제출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총독부의 전시체제에 의한 강력한 통합 지배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둘째 경학원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이미 군의 통폐합으로 그 활동이 위축되거나 경제적 지원이 불가능한 문묘에서 제출된 것도 다수 있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래 문묘는 향교의 재산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그것이 부윤, 군수, 도사 등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자유로운 활동이 억제되었다. 향교재산의 이용이 어려워지자 문묘의 유지 자체가 곤란하게 되어 양반과 유림사이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총독부는 1919년 3·1독립운동을 계기로 향교재산의 환급을 제시하게 됐다.[35] 그러나 군이 폐지된 지역의 경우, 행정상으로 통합되어 소멸된 향교의 재산은 사용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문묘는 다른 문묘와 통합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경학원에는 이렇게 행정상 통합되어 소멸된 문묘로부터 제출된 보

고 서술하고 있었다. 『朝鮮及滿洲』朝鮮 제1권, 1908년 6월호, 72면.(皓星社 영인본 131면)

35) 大正9년 6월 「조선총독부령」 제91호, 「향교재산관리규칙」1920년 6월 29일 공포.

고서 기록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경학원잡지』의 「지방보고」란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 1911년 현재 37개 군 중 16개 군이 폐지되었는데 이 중 5개의 군의 문묘가 활동에 관한 내용을 경학원에 보고하고 있는데 폐지된 경기도의 문묘 중 이러한 형태로 보고서를 제출한 문묘는 1943년까지 11개 군에 달한다. 충청북도의 경우 8개의 군이 폐지되었는데 이 중 5개 군에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1911년 통합 된 군 중 모든 문묘에서 보고서를 내고 있다.

또한 『경학원잡지』에는 1943년 추기문묘석전에 대한 보고가 327개소에서 제출되었다. 당시 총독부 자료조사에 따르면 1931년 현재 330개의 문묘가 존재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어 행정상 통폐합되었던 군의 문묘 활동이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36] 이러한 현상은 행정상 군의 통폐합과 문묘의 존속이 완전하게 일치된 것은 아니었다는 의미인데 총독부가 향교와 문묘에 대해서 강제적인 지배정책보다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허용하고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문묘들의 보고서를 보면 앞서 살펴 본 문묘와 같이 운영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다. 이들 보고서에는 문묘석전의 거행시간 이나 문묘수리의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조직된 각종 단체들은 많은 의연금을 확보하여 향교재산 대신으로 사용한 내용을 당국에 공공연히 제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16년 10월 전라남도 樂安향교는 合郡으로 인해 폐지된 곳인데 낙안향교의 유림세력들이 당국에 청원하여 문묘의 수리를 시작하는 한편 그에 관한 시공내용을 경학원에 보고하고 있고,[37] 1917년 1월 25일 충청남도 魯城향교에서는 論山郡에 통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림·朴相奎의 문묘수리 공적 기념비를 건립한 후 그 과정을 경학원에 자세하게 보고하고 있다.[38]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사례가 있는데 1927년 11월 30일 北間島 龍井里에서도 경학원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이 보고서에는 용정리에서 처음으로 문묘가 건립되었다는 내용과 사진이 제출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36) 『경학원잡지』제48호, 1944년 4월, 60면 ; 「朝鮮文廟一覽表」, 『朝鮮』제226호, 1934년 3월.
37) 『경학원잡지』제13호, 1917년 3월, 35면.
38) 『경학원잡지』제13호, 37면.

이 시기 처음으로 북간도에도 문묘가 설치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후 1931년 3월 31일에는 용정문묘의 석전행사 내용과 함께 참가한 유림들의 동향, 그리고 행사 후 유림정기총회가 개최되었던 내용들을 보고하고 있다.[39]

이와 같은 경학원과 문묘와의 관계를 보면, 첫째 경학원은 결코 소수의 친일세력의 활동공간이 아니며 최소한 경학원을 상부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적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조선의 85.4%를 차지하는 지역이 향교나 문묘를 통해서 경학원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40] 둘째로 경학원과 문묘는 적극적인 관계를 맺으면서도 그 목적은 서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중앙에 있는 경학원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의 문묘와 향교는 총독부의 사회교화 시책을 수행하는 기구로써 이용했지만, 지방의 문묘와 향교는 경학원과의 접촉을 통해 세력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폐지된 군 소속의 문묘와 향교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들 스스로가 군의 폐지, 문묘의 통합 등으로 인한 세력 기반의 소멸 위기를 경학원이라는 식민지권력과의 접촉을 통해서 극복하려 하고 나아가 여전히 그들 세력의 생명력을 과시하려는 노력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그러나 향교와 문묘의 이러한 노력들은 식민지기 조선사회에서 중앙의 경학원과 지방의 향교와 문묘라고 하는 상하 계층적 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그들의 존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문묘제사의 변용까지 허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에 관한 검토를 석전행사의 사례를 들어 알아보자.

2) 식민지권력으로 복속된 '전통'제사

필자는 문묘 주최의 제사를 포함한 행사와 경학원의 역할을 검토하여 이들

39) 이 때의 유림의 참가자수는 485명이었다. 『경학원잡지』제33호, 1931년 12월 25, 46면.

40) 현재까지의 조사에 의해서는 경학원과의 관계를 엿볼 수 없는 약 15%의 지역이 있는데 이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며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써 별도에서 논하기로 한다.

양자간의 관계를 더욱 분명히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경학원은 설립 당시 문묘의 각종 강연회 및 기념행사에 직원과 강사를 적극적으로 파견했는데 점차 향교와 문묘에서 경학원의 직원 및 강사의 출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의연금 등으로 수리되는 문묘의 낙성식과 준공식의 경우, 이를 기념하는 비문이나 축의문의 제작 및 송부를 경학원에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는데 예를 들면 1917년 10월 4일 경상남도 함안군에서는 문묘의 수리 후 낙성식과 백일장을 기념행사로 개최했는데 이를 위해 경학원 강사파견을 요청하여 해당 강사 鄭準民이 참가했다는 기록이 있다.[41]

1921년 6월 24일 충청남도 예산군 향교는 백일장 개최를 위해 군수의 요청에 따라 경학원의 담당 강사 成樂賢을 초대했고 성낙현은 백일장과 '경학강연'을 개최했는데 백일장의 경우 응모인원이 2100명에 달하며 그 중 100명이 합격했고, '경학강연'의 경우 유림과 신사 등 6000여명이 참가했다고 한다.[42]

경상북도 영일군 海興향교에서는 1925년 11월 16일 사회교화사업에 관한 강연회를 가졌는데 군수의 요청으로 경학원의 사성 李大榮이 파견되었고, 1926년 11월 9일 충청북도 충주군 향교에서는 이 지역 유교진흥회의 추진으로 강연회가 마련되었는데 사성 金完鎭과 강사 韓昌愚가 강연자로 참가했으며 이 때 명륜당 주최의 서당 학생 시험에 참관, 이를 표창하고 덕행자의 업적을 현창했다.[43]

참고로 향교와 문묘뿐 아니라 서원에서도 경학원 강사와 직원을 초빙하는 사례가 있었다. 1916년 5월 21일 보고 된 경기도 城州郡 城山서원에서는 有司 李學魯가 鄕飮禮를 위해 경학원의 경기도 강사 황돈수의 출장을 요청했고[44]

41) 『경학원잡지』제16호, 35면.

42) 이 강연은 백일장을 개최를 위한 행사로써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연 참가자 6000명이란 숫자는 백일장의 참가자를 포함한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백일장이나 강연의 참가자 인원을 과장되게 보고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으나 참가자의 정도가 해당 지역과 경학원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유익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삼고 싶다. 『경학원잡지』제22호, 1922년 3월, 78면.

43) 『경학원잡지』제27호, 55면. ; 『경학원잡지』제28호, 1927년 12월, 76면.

44) 『경학원잡지』제12호, 48면. 흥미로운 것은 이학로란 인물은 그 후 1921년 5월 28일 경학원의 강사로 임명되어 1938년 10월 22일 사망할 때까지 담당했다.

1931년 3월에는 경상북도 경주군과 달성군 소재의 西岳서원, 道東서원, 玉山서원 등에서 향음례에 관한 보고서를 경학원에 제출하고 있다.[45]

그 외에도 향교와 문묘의 행사에 일본인의 참가가 눈에 띄는데 경학원의 提學에 오르고 경성제국대학의 교수로 근무한 高橋亨의 경우는 경상북도 지방의 향교에 출입이 잦았고 1918년 11월 7일 대구고등보통학교의 교장 시절 경상북도 大邱 지역 향교에 유림과 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강연한 적도 있었다.[46]

두 번째로 경학원의 석전행사 거행시간이 조선총독부의 행정상 이유와 교화 효과의 목적 때문에 자주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지방의 문묘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자간의 관계를 검토할 수 있다.

1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석전행사는 문묘의 가장 중요한 의례이자 국가제사인데 이 석전행사의 거행시간이 식민지기에 들어서는 매우 유동적이 되었고 전시동원체제기에 들어가면 그 거행 일시조차 조선총독부에 의해 획일적으로 규제되게 된다.

먼저 문묘석전의 거행시간을 살펴보면 대한제국기 까지는 제사의 성격으로 인해 석전이 야간에 이루어졌으나 식민지기에 들어서면 대부분이 오전 중에 거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고정적이지 않았으며 지방에 따라서 거행시간의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면 1917년 3월 충청남도 아산군 문묘의 보고에 의하면 문묘석전이 대한제국기와 같은 밤 9시에 거행되었으나 1922년 10월 30일 평안북도 楚山郡 문묘에서는 그보다 늦은 오후 10시에, 1926년 9월 27일 함경남도 會寧郡 문묘에서는 오전 1시, 1931년 3월 26일 경기도 始興郡 문묘에서는 오후 1시에 문묘석전이 거행되었다고 한다.[47]

바꿔 말하면 문묘에서의 석전거행 시간은 명확한 질서가 없었고 각 지방의 문묘의 상황에 따라 상이했었는데 그것은 대부분 지방청의 상황에 따라 변동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30년대에 접어들며 거의 대부분의 문묘석전이 오

45) 『경학원잡지』제33호, 38면.
46) 『경학원잡지』제19호, 1918년 12월, 36면.
47) 『경학원잡지』제14호, 63면 ; 제24호, 1923년 12월, 89면 ; 제28호, 1927년 12월, 74면 ; 제33호, 45면. 이들 시간의 문제는 보다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본 고에서는 각 문묘의 석전 거행 시각의 산만성을 강조한다.

전 10시 혹은 오전 11시에 시작되는 데 그것은 참석자들의 상황과 행사 이후 벌어지는 각종 강연회 등 행정적 처리를 위한 시간을 고려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식민지기 이전에 문묘석전이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거행되어 온 것과 비교하면 한국병합 이후의 문묘석전은 사·공립 보통학교의 학생들을 시작으로 교직원 및 일반인, 그리고 일본 헌병에 이르기까지 '개방된' 의례의 형태로 바뀌었으며, 이로 인해 권위와 위엄 또한 변형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조선을 알리는 무수한 관광 소개란에 경학원과 문묘는 각 지방의 대표적 명승으로 소개되었는데[48] 이것은 이들 공간과 그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석전의례, 아악 연주 등이 하나의 '볼거리'로 전락되었던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1937년부터는 종래의 음력으로 거행되던 석전행사가 양력으로 둔갑하여 봄에는 4월 15일, 가을에는 10월 15일로 고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선총독부의 행정상 편의를 위한 기계적 변경이었으며 제사의 기능과 의례의 신성함은 완전히 무시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신성한 의례가 식민지 지배정책에 복속된 것이다.[49] 그러나 이 조치는 경학원과 더불어 조선 전 지역의 문묘가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준수하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에서 향교와 문묘가 경학원과 맺는 관계는 매우 밀접하며 경학원을 통해 조선총독부의 모든 정책이 각 지방의 향교와 문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가시화된 강제성을 띄우지는 않고 있으나 식민지의 하부에 위치한 향교와 문묘가 경학원을 통해서 식민지권력과의 접촉을 기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전통'의례의 복속까지도 요구되는 일이 되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지방의 향교 및 문묘는 경학원이 필요했으며 무슨 목적으로 이들은 식민지권력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했을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당시 조선사회의 양반과 유림집단의 사회적 위치를 확인하고 그들의 동향을 실마리로 살펴보기로 한다.

---

48) 『朝鮮年鑑』 1941년도, 경성일보사.
49) 「경학원」 『經學院雜書類綴』 사회교육 88-26, 1915년-22년, 국가기록원 소장.

4. 구질서의 혼돈, 식민지권력과의 타협, 그리고 좌절

이 장에서는 향교 및 문묘를 중심으로 한 양반·유림집단이 중앙의 경학원과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선총독부의 지배 정책을 어떻게 인식했는가에 대해 그들 세력을 둘러 싼 사회의 변화를 기축으로 생각해 보려 한다. 한국병합 이후 조선의 사회변화에 대해 양반 및 유림집단의 대응과 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 그리고 경학원과의 협력적 관계를 선택한 그들의 의도를 검토하기로 하겠다.

1) 식민지 정치로의 변화와 향촌 질서의 혼돈

한국병합이후 지방의 양반이나 유림집단은 사회변동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들의 세력유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이러한 불안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은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지배정책에 참가하려는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대한제국기부터 조선의 근대교육제도에 관계하고 있던 幣原坦은 1919년 당시의 지방의 양반 및 유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 현재 지방의 양반·儒家가 新政治에 대해 고통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물으면 자신들은 지배권을 잃어버리고 신분이 천한 자가 군수나 군서기 같은 것이 되어 세력 있게 그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50]

이 자료를 통해 볼 때 당시의 양반이나 유림이 지배권의 상실과 사회질서의 급격한 변화로 고통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대한제국기의 한성부윤으로 재직했으며 조선총독부의 중추원 참의 겸 사무관으로 활동한 張憲植의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에의 불안은 더욱 분명해진다.

장헌식은 1921년 경상북도의 안동과 상주, 그리고 대구지역을 시찰하며 양반과 유생, 그리고 청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것은 3·1 독립운동 이후 지역사회에 대한 동향을 살피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인터뷰

50) 幣原坦, 1919년『朝鮮教育論』, 六盟館, 107-108면.

에는 당시 양반과 유생들의 조선총독부에 대한 의식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합방이래 총독부는 중앙의 양반만을 후대하고 지방의 양반, 유생은 무시해 그들을 대함이 도리와 같지 않다. (중략)吏屬청년배의 발광이 심하여 구관을 타파하고 계급을 파괴하려하여 양반유생은 물론 老年계급을 모욕하기를 꺼리지 않기에 종래의 양반, 유생의 사회적 세력은 갑작스럽게 실추되어 (중략)구관의 유지를 열망한다. (중략)중추원 관제에 따른 參議선임과 같은 것은 그들(양반유생-인용자)의 가장 기대하는 바이다.[51]

위의 자료를 보면 다음 두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이 지역의 양반이나 유생들은 조선총독부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고 그들의 불만은 총독부가 "중앙의 양반만을 후대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둘째로 "吏屬청년배"의 "구관을 타파하고 계급을 파괴하려"는 행위를 염려하고 "구관의 유지를 열망"하며 나아가 이들은 지방의 참의와 같은 사회진출의 길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 지역의 사회적 변화가 양반 및 유림 집단의 지위를 실추시키는 상황이었으며, 양반 및 유림들은 이러한 위기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활동의 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헌식의 경력을 보아 인터뷰 대상으로 지칭한 양반 혹은 유생이 각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만한 인물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데, 설사 인터뷰의 내용이 이 지역의 특수성을 나타내고 그 대상이 소수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3·1 독립운동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을 1921년에 상기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식민지기 조선사회에 대한 조선인의 인식을 생각할 때 주목할 만한 자료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시기 양반과 유림의 사회적 위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

---

51) (원문)併合以來、總督府は中央の兩班にのみ厚くして、地方の兩班儒生を無視し之を遇するに其の途を以てせす。其の (中略) 吏屬青年輩の跋扈甚たしく、旧慣を打破し階級を破壞せんとして兩班儒生は勿論、老年階級を凌辱して憚らす、爲に從來の兩班儒生の社會的勢力頓に失墜して (中略) 旧慣の維持を熱望す (中略) 中樞院官制に伴ふ參議選任の如き彼等の最も期待せる所なり
「鄕校財産地方施設關係書類」『經學院雜書類綴』88-0929, 1915년-21년, 국가기록원 소장.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례를 들어보겠다. 그것은 다름 아닌 '經學院直員 僞稱詐欺 事件'이다.

경학원에서는 1924년 4월부터 일어난 '경학원직원 위칭사기 사건'의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경학원잡지』에 게재하고 각 향교와 문묘에게 주의시키고 있었는데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기 사건의 보고 내용은 동년 7월 16일과 1925년 12월 26일, 1926년 1월 11일, 그리고 1927년 7월 14일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보고 내용은 계속 제출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지역은 충청북도가 가장 눈에 띄어 충주, 괴산, 제천, 단양, 淸風 지역까지 확대되었으며 전라남도의 구례지역에서도 같은 사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범인은 경학원의 직원임을 사칭하여 피해지역의 향교재산을 조사하거나 그 외의 지역의 유림조직을 파악한다는 명목으로 돌아다녔다는 사실과 함께 출장비를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음이 드러났다. 약 4년에 걸친 이러한 사기행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경학원은 각 지역 문묘에 통첩을 내려 보냈는데 그 내용은 이번 사기행각으로 인해 경학원과 피해지역간의 신뢰관계가 손상됨을 우려하는 것이었다.[52)]

이 사건은 당시 지방의 향교와 문묘가 경학원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좋은 사례이다. 첫째, 경학원 직원이란 직책이 지방의 유림집단에게 어느 정도 인정되는 권위였다는 것인데 경학원 직원의 이름으로 문묘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것과 유림조직의 활동상황 조사가 가능했으며 지방의 유림들의 협조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둘째, 이것은 최소한 피해지역에서는 경학원과 문묘간의 관계가 우호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범인들이 금전을 요구했을 때 그것이 통용되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셋째, 피해지역에서는 '전국유림대회'나 '문묘직원대회'등과 같은 행사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관심과 참가의 기대감이 범인에게 금전을 전달하는 결과를 낳았다.

향교와 문묘는 이러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내부의 재정관계로 많은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향교재산의 환급으로 인한 이익 다툼으로 향교의 재산관리를 둘러싸고 횡령, 장의 선출의 문제 등

52) 「僞稱經學院直員博士に關する件」通牒經 제227호.

이 대두되었다.

1924년 2월 24일 전라북도 高敞郡 향교 명륜당에서는 유림대회가 열렸는데 개최의 취지는 "낭비되는 재산을 향교에 還復"이었다. 군청에서 향교재산을 관리할 때 유림의 일부가 개인적으로 향교의 토지를 매매한 것이 발단이 된 이 대회는 조사위원 8인을 선발하고 해산했다.[53]

1927년 12월 『중외일보』의 기사를 보면 경상남도 김해군의 군수가 향교의 재산을 경성제국대학에 편입시키는 것을 제의하자 유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11월 25일 '全郡儒林大會'를 개최해 "향교재산은 유림의 생명이 존재하는 한 절대 보존"할 것이며 "만일 외래로부터 재산에 대한 침해운동이 있을 때"에는 전 유림이 "결속 대항"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54]

또한 흥미로운 것은 『동아일보』에 실린 향교 내 장의 선출에 관한 기사인데 전라남도 보성군 유림단 3인이 조선총독부를 방문해서 齋藤實총독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내용이었다. 그 내용은 총독부가 "그 향교장의를 조선총독부령으로는 유림단에서 선거하자"고 하나 실지로는 "각 면에서 선거를 하며 또는 그 선거하는 인물은 반드시 유림 중에서 할 것임에 불구하고 유림 이외의 사람들을 선거하는 폐단과 또는 각 면의 人數가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진정하여 이후로는 이러한 폐단이 없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55]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식민지기 조선의 향교와 문묘는 대내외적 갈등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향교재산에 관한 금전적 문제만이 아니었으며 여기에는 향교와 문묘를 중심으로 한 양반·유림집단과 그와 충돌하는 타 집단간의 갈등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근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겪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사회질서에 의해 지탱되어 온 권위와 가치관이 새로운 질서의 압박으로 분열되고 재구축되어 결국에는 이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이 근대라고 설정한다면, 향교와 문묘는 기존의 특정집단이 전유했던 권위와 가치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근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이 권위와 가치의 '개

53) 『동아일보』 1924년 3월 8일 기사.
54) 『중외일보』 1927년 12월 3일 기사.
55) 『동아일보』 1929년 10월 5일 기사.

방'과 '공유'를 요구하는 신세력과의 충돌로 인해 변형되고 재구축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구질서'를 '전통'이란 또 하나의 이름으로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이 근대의 생산기능이라면 향교와 문묘의 성격은 이미 기존의 권위와 가치로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식민지기 조선의 향교와 문묘에서 일어났던 사례를 들어 신·구질서의 갈등이 어떻게 표출되었는가를 살펴보자.

2) '舊慣 타파': 근대 지식인의 도전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의 향교와 문묘가 중앙의 경학원과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급변하는 식민지기 조선 사회에 대한 위기의식이라 할 수 있다. 조선왕조 시대부터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지배세력으로서의 사회적 위치는 식민지기 조선에 들어와서 그 권위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향교가 교육시설로 이용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화는 쉽게 찾아볼 수 있어 그 주도권 확보를 둘러싼 여러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1922년 7월에 일어나 경상남도 진주군 향교의 유림들이 벌인 향교 내 신교육 거부운동은 그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겠는데 그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주군의 청년유지[56]들은 '진주 제일 야학교'를 설립하고 150여명에 이르는 생도를 교수해 왔는데 학령초과 아동의 수용이 문제가 되어 야학교를 진주향교로 이전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 후 군수인 太田德次郎와 향교 장의의 허락으로 수리비 1400여원을 들여 인가를 받으려 할 때 30여명의 유림들이 반대운동을 벌이고 "신교육을 향교에서 벌이는 것은 공자의 聖靈을 불안케 함이요 신교육과 공자의 道와는 서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림들은 야학교의 향교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한문 강사를 물색하여 향교 내에 '한문강습소'를 설치하고 '한문강습회'에 대한 협의를 위해 수 차례의 유림회를 개최했다.

56) 여기서 말하는 청년 유지란 근대 교육을 받은 신지식인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인물 검토가 필요한다. 이것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

청년유지들은 이에 반대하며 현 사회에 “한문강습의 필요 없음”과 향교의 한문강습을 “유림자에게만”하는 이유를 묻고 “시대의 변천과 처지”를 들어 “유림의 반성을 구했으나”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청년유지들은 진주군수와 대전군수에게 협조를 구했으나 거절당했고 그 후 시민운동의 개최를 준비하는 등의 자세를 취해 보는 듯했으나 결국은 청년유지측이 양보해 보통강습회의 교육내용의 기본을 한문교육으로 변경하여 다시 타협을 하려 했다. 그러나 이때에도 유림측은 “보통강습회를 향교에 두고는 완고한 촌 유림이 의연금을 내지 아니할 일과 5만圓의 기본금”모집에 난색을 표하며 타협에 응하지 않았다. 그 후 보통강습회의 교원과 생도가 향교를 점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청년측이 경상남도 내무부장 矢島音次에게 호소해 矢島音次의 교섭으로 보통강습회는 향교에서 개강하게 되었다.[57]

위의 사건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 많은데 그것은 당시의 청년지식인들이 향교 및 유림세력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유림들의 주장하는 ‘한문강습’을 사회에서 ‘필요 없는’ 가치로 일축하고 있으며 유림세력들의 태도가 시대와 처지에 부적합함을 지적하고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1920년대에 확산된 ‘생활개선운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는데 동시기에 고조된 ‘사회의 개조’와 ‘생활력의 향상’, ‘농촌진흥’, 그리고 ‘교육의 확산’의 운동이 진주지방 청년세력에게‘舊慣’의 상징인 향교와 문묘를 타파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했음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진주의 청년세력과 시민들의 비난이 있었듯이 진주군수와 대전군수, 그리고 경상남도 도청과 같은 식민지권력이 청년세력보다 유림들의 편에 서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경제적으로나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여전히 유림세력들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향교 및 문묘와 근대 지식인간의 갈등은 타 지역에서도 쉽게 찾아

57) 『동아일보』 1922년 7월 11일, 22일 기사. 이때 경상남도 내무부장 矢島音次이 향교 측과 어떠한 교섭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향교 측의 납득할 만한 조건이 제시되었을 가능성은 크다고 하겠다.

볼 수 있다. 바로 앞서 소개한 경상북도 안동의 '태형 사건'이 그것인 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25년 11월 경상북도 안동의 陶山서원에서 이 서원 소속의 齋任 李棟欽과 李源慤이 소작인에게 태형을 가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이 지역 노동단체와 그 외 제 단체에서 '도산서원 철폐운동'을 벌였는데 이 기세가 확산될 뿐 아니라 장기화 되었다. 안동火星會, 풍산소작인회, 순천노동연합회위원회, 전남동부청년연맹위원회, 전남순천농민연합회, 원산노동회, 대구청년회 등의 이름으로 각종 결의문이 제출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도산서원 측에서는 1925년 11월 20일 당회를 열어 이번 태형 사건이 "시대에 불합"하다 하여 "齋任 이동흠, 이원각의 징벌을 인준"하였고 "재임의 태형 행위를 추회하나 개인의 과실로 서원 전체에 모욕의 명사와 철폐의 결의를 더한 안동화성회와 풍산소작인회"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른다.[58] 그러나 이 도산서원 철폐운동은 도산서원의 '추회'의 성명문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유림 측에서는 동년 12월 전라남도 나주군 檜淵서원의 발기와 경상북도 상주군 道南서원의 후원으로 상주향교에서 '全道儒林大會'를 개최하기 까지 사태가 심각하게 되었다.[59] 이 도산서원 철폐운동에서도 총독부는 유림의 편에 서서 사건을 무마시키고 '도산서원 성토대회'를 무산시키려는 활동을 벌여 비난을 사기도 했다.[60]

이 사건은 양반과 유림집단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으나 더 나아가 공자에 대한 비판을 노골적으로 내세운 사건도 있었다.

1931년 1월 1일 잡지 『新民』의 신년호에 게재된 李仁의 「新法律漫評」이란 제목으로 게재한 「婿養子制度」와 「同姓婚姻의 可否」 의 소개가 발단이 되었다. 이인은 日本대학과 明治대학의 법과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인물인데 이 글에서 조선사회의 가족제도를 비판하며 "氏姓 존중의 義가 혈통전승에 있고 계계승승의 義가 同祖同孫에 있다면" 여아에게도 상속권을 주는 것이 마땅하며 "이조에 와서 婿養子나 外孫奉祀를 극단의 恥醜으로 알고 또

58) 『시대일보』 1925년 11월 27일 기사.
59) 『시대일보』 1925년 12월 23일 기사.
60) 이상의 내용은 『시대일보』 1925년 11월 22일, 24일, 27일, 30일, 동년 12월 23일, 1926년 1월 14일 기사내용을 정리한 것임.

이것을 禁壓하게 된 것은 (중략) 형식만 숭봉하고 내용과 실질의 공허됨을 깨닫지 못한 孔腐子(孔子-인용자)의 殺人的 餘毒"이라고 역설했다.[61]

또한 동성동본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관습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는데 "4촌 5촌간의 혼인은 곧 贊意를 표하지 못하겠으나 10여촌 이상의 遠族이고 생리적 유전과 건강체질에 어떠한 관계도 없는 혼인은 시대의 요구일 뿐 아니라 우리 생활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때에 맞지 않는 舊慣과 孔仇(孔子-인용자)의 偏見狹思로 案出된 禮法綱論을 본받은 사회가 流布되었음을 생각할 때 그 죄악이 중대함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戰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62]

이 글로 인해 조선 각 지역의 양반과 유림세력들의 반발은 거세게 일어났고 1931년 3월 27일 경학원에서는 "先聖孔夫子를 극단으로 모독했다"고 비판하며 경학원의 직원과 각도의 강사, 그리고 부설 교육기관인 명륜학원의 강사와 평의원이 일제히 결의해 성토문을 작성하고 전 조선의 향교와 서원 및 그 외의 단체에 배부했다. 그리고 잡지의 주간인 李覺鍾에게는 그가 "조선총독부 내무국 사회과 촉탁"으로 봉직하며 "향교재산을 감독하고 교화사업을 지도 감독(중략) 재산관리자에게 결탁하여 향교재산으로 잡지를 구독하게 하고 이를 (문묘-인용자)직원, (향교-인용자)장의에게 구독하게 했는데 그리하면 향교의 유림은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조에 대해 모욕을 恣行하니(중략) 이는 모순이 된 것이요 직무상의 의무로도 위배가 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절교를 선언하고 이각종과 이인과 관계한 모든 언론 및 잡지의 불매운동을 벌였다.[63]

이와 같은 유림들의 비난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아 동년 4월 20일 조선총독부의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다음 해인 1932년 5월에 이르기까지 각 도의 유림회 및 문묘에서는 총독부에 진정서 제출, 잡지 『신민』의 폐간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토대회가 이어졌다.[64]

이상의 사실들은 다음의 공통점을 가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종래의 유교적 사회질서, 유교적 문화를 '舊慣'이라 규정하고 타파의 대상으로 보는 데 있

61) 李仁, 1931「新法律漫評」『신민』제64호, 40면(도서출판 역락 영인본, 358면).
62) 앞의 글, 42면(도서출판 역락 영인본, 360면).
63) 이상의 내용은 『경학원잡지』제33호, 27면.
64) 『경학원잡지』제35호, 1932년 12월 25일, 36면.

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유교에 대한 비판이기 보다는 이를 기반으로 한 양반·유림세력들에 대한 비판이며 또한 유교적 문화를 중심으로 한 종래의 조선사회에 대한 개선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조선사회 개선'에 대한 노력은 경제의 안정을 통한 생활의 안정이며 교육의 확산을 통한 민중문화의 보급과 지방을 개량하여 농촌을 진흥시키는 일이기에 "구관의 유지를 열망"하는 양반·유림집단과의 충돌은 예상되는 결과인 것이다.

근대 지식인들의 요구에 대해 양반과 유림집단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으며 그들이 경학원을 매개로 한 식민지권력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은 이러한 조선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선택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 지배정책과의 타협을 통해 근대 지식인의 도전에 압력을 가할 수 있고 종래의 사회적 위치를 유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식민지화된 조선사회에서 양반과 유림세력들의 이러한 선택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회복하려는 그들의 '노력'과 권력관계에 규제된 '전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총독부로써도 이러한 양반과 유림세력과의 관계는 사회주의 사상의 침투를 견제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양자간에는 '목적의 차이'를 가진 '협력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중일전쟁의 발발로 일본제국 전체가 전쟁에 돌입하면서 식민지 조선은 황민화정책을 필두로 전시 총동원 정책에 동원되고 포섭되면서 양반·유림의 세력유지를 위한 모색도 좌절되어 갔다.

1937년 10월 16일 경성부민 강당에서 개최된 '全鮮儒林大會'가 그 대표적 예인데 '전 조선 유림의 연합'을 목표로 한 이 집회는 다음날인 17일 경학원을 본부로 하는 '조선유도연합회'의 결성을 준비하는 전야제였다. 총독부의 정무총감이 총재가 되어 각 지방의 유림 단체를 통합하게 되는 '조선유도연합회'는 그나마 미력으로 잔재하던 지역의 제 조직을 획일적으로 통합하게 되었고 1944년이 되면 명륜학원의 후신 재단법인 명륜전문학교가 명륜연성소로 개편되어 청년 훈련소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것은 '국체 관념을 明徵하고 황국신민으로써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상호간의 信愛 협력하여 굳게 단결할 것'[65]을 목

65) 昭和117년 10월 「조선총독부제령」 제33호, 「朝鮮青年特別錬成令」 1942년 10월 1일 공포, 12월 1일 시행.

적으로 세워진 것이었다. 심화되는 전시체제 속에 일본제국은 '대동아의 실질서'와 '동아의 영구 평화'라는 명목으로 식민지 조선을 강력히 통치했고, 이러한 상황은 식민지 권력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선택하여 '구관의 유지'와 '유교의 진흥'을 앞세워 유교적 질서를 통한 양반·유림의 헤게모니 장악 의도를 좌절시켰다. 총독부는 경학원을 중심으로 식민지기 조선의 양반·유림집단을 행정적으로 통합하게 되었고 이들 역시 '전쟁 동원'이라는 회오리에 휩쓸리게 된 것이다.

5. 끝으로

지금까지 식민지기 조선의 향교 및 문묘의 제 활동을 검토하여 경학원과의 관계 및 그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향교나 문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세력의 식민지권력에 대한 대응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식민지기 조선의 향교와 문묘는 한국병합 이전의 세력들의 영향력과 새로운 사회질서로 형성된 세력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향교와 문묘를 중심으로 활동한 양반·유림집단은 '문묘보존'과 '유교진흥'이란 슬로건 아래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保持하려 했으며 거금의 제향비와 향교 및 문묘의 수리, '열부'및 '절부', '효행' 등의 현창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하지만 향교와 문묘를 출입하는 근대 지식인들은 기존의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며 양자는 갈등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조선총독부의 권위 아래에 위치했으며 그것은 조선지배 정책의 일환으로 허락된 권위에 불과했다.

두 번째로 지방의 향교와 문묘는 중앙의 경학원과 계층적 관계에 있었으며, 이것은 식민지 지배 아래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학원을 상부기관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경학원과의 접촉을 통해 식민지권력과의 관계를 기대하며 제 활동의 계속을 의도했다. 지방행정 제도의 변화로 향교 및 문묘 통합의 현실 앞에 놓인 유림들은 경학원과의 자발적 관계를 맺음으로 총독부의 산하에 위치하는 것을 대가로 세력유지 및 향교와 문묘의 지속적 활동을

인지 받는 목적을 가졌던 것이다.

세 번째로 향교와 문묘를 중심으로 한 양반·유림들이 식민지권력과의 '타협적' 관계를 맺게 된 요인으로는 조선사회의 급변으로 인한 향촌질서의 혼돈과 신지식인 세력의 도전을 들 수 있다.

근대교육만이 사회진출의 방법이 된 식민지 조선에서 유교적 관습을 여전히 보수하고 있는 양반과 유림집단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함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었으며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세력 하에 위치한 집단이 근대교육의 수용으로 지역 통치의 관리자로 위치하면서 양반과 유림들의 불안은 팽창되었다. 또한 지역의 근대 지식인들은 유교적 관습을 타파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향교재산의 공유를 주장하는 등 대항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반과 유림세력들은 조선총독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권위를 유지하려고 했다. 조선총독부 또한 폐지된 문묘와 향교의 활동을 묵인하면서 조선지배의 난점인 구 지배세력간의 협력관계를 모색하려 했으며 새롭게 대두되는 조선사회의 근대 지식인 집단을 경계하는 데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양자간의 관계는 결코 대등한 위치에서의 '협력'관계가 아니었으며 양반과 유림들의 노력은 언제나 식민지 통치 지배 하에 있었음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들의 의도는 향교와 문묘의 활동이 총독부로부터 강제적 억압을 받지는 않았으나 항상 감시 통치하에 있어야 했으며 전시체제에 들어서는 '총동원'이란 명목으로 '조선유도연합회'에 소속되어야 했다.[66]

본고에서는 경학원과 향교 및 문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연구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경학원 및 명륜학원의 관계자들의 식민지 권력과의 '능동적 관계의 선택'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활동을 검토했으나 지방의 유림세력들에 대한 구체적 인물 조사 및 식민지기 조선

---

66) 필자는 拙稿,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経學院 : 儒教教化機關と儒教イデオロギーの再編」에서 총독부의 유교정책과 경학원 문묘석전 의례의 절차와의 관계, 그리고 그 변용과정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본고의 인용문 중 일본어 외의 식민지기 조선의 사료들은 현대 한국어 문법에 맞게 변형시켰다.

※본고의 제출까지 三ツ井崇씨와 이승원씨 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표한다.

사회의 전체에서 바라 본 유림의 위치는 보다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고찰이 요구된다. 그와 더불어 이들 유림세력의 활동을 지역적 차별성을 고려해서 분석하는 작업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일 것이다. 앞으로는 지역 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해방 후까지 연구의 시야를 넓혀 이들 세력의 활동 변화를 명확하게 밝히고 싶다.

(필자: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연구원)

주제어: 경학원, 향교, 문묘, 유교이데올로기, '전략적 협력 관계'

투고일(2005.11.8), 심사시작일(2005.11.14), 심사종료일(2005.12.8)

참 고 문 헌

『經學院雜書類綴』사회교육 88-26, 국가기록원 소장, 1915-1922.
『經學院雜誌』경학원, 京城, 1913년~1944.
『朝鮮』제226호, 조선총독부, 경성, 1934년.
『朝鮮總督府官報』아세아문화사, 서울, 1985~1990.
『施政年報』クレス出版, 東京, 1991.
『朝鮮年鑑』高麗書林, 서울, 1992.
『朝鮮及滿洲』朝鮮, 皓星社, 東京, 1998.
幣原坦, 『朝鮮教育論』, 六盟館, 1919.
李仁, 「新法律漫評」『신민』제64호, 1931, 도서출판 역락 영인본, 2002.

윤희면, 1990『조선후기 향교연구』일조각.
강대민, 1992『한국의 향교연구』경성대학교 출판부.
이명화, 1993「조선총독부의 유교정책」『한국독립운동사연구』7.
정규영, 1996「조선총독부의 조선유교지배」『학생생활연구』4.
성균관대학교, 1998『성균관대학교 육백년사』.

〈Abstract〉

‘Collaboration and Frustration’ to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of Kyonghagwon, Hyangyo and Munmyou

Rhyu, Mi-na

In the colonial Chosun, the Kyonghagwon was the purposed institution for collaboration established by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in the year 1911. By the time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 Kyonghagwon, replacing Sunggyungwan of Chosun Dynasty as a colonial institution, had won the Yangban-Confucian scholars society over to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and played a role of propaganda in local provinces to enhance the colonial ruling.

Centering around Hyangyo and Munmyo, Yangban-Confucian scholars sought for solidarity, and by continuing activities they contrived to clarify their identity as well as to approach up to the colonial ruling power, maintaining an active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kyonghawon. In the whirlwind of the rapidly changing colonial society, it was ‘a strategic choice’ for maintaining their power.

This collaborative relationship, however, was not in the equal terms with the Chosun Gorernment General. In fact, it was obvious that all the work

* Research Fellow, Institute of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Yangban-Confucian scholars did was always under the colonial government ruling

Key Words : KYONGHAGWON, HYANGYO, MUNMYO, Confucian Ideology, Collaboration